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공정한 사회와 교육이 나아갈 길



김왕복

대통령의 8·15 담화 이후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집권 후반기 정책 이념이 발표되자 각 부처는 앞 다퉈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예산안에 포함된 무상보육 지원 확대, 특성화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3대 핵심과제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교육정책들을 양산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계층 간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공정한 교육 정책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나 경제력에 따른 부유층과 빈곤층이 존재한다. 하지만, 선진 개방사회에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엘리트 지도층에 진입하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진정으로 공정한 기회란 무엇일까요?

공정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 부자와 서민의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공정의 기준이 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20세기의 칸트로 불리는 존 롤스는 사회계약 원리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제2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를 우선 적용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면 차등 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 조정의 원리란 먼저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하고 그 다음 불평등이 존재하면 사회 임의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정 기준이다.

교육 분야의 공정사회 기준은 롤스의 제2원리를 따라야 한다. 우선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모든 입시에서 기회 균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선발 기준의 공정과 선발 과정의 투명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균등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는 차등 원리를 적용하여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중 잣대 적용이 교육 분야 공정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족 학생, 농어촌 학생들을 서울의 강남 학생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가난한 학생이 입학 성적은 되지만 교육비 때문에 진학을 포기한다면 이는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 예로 자율형 사립고가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할당된 20%를 채우지 못한다고 다른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사실상 진입 장벽을 해 놓고 균등한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폭 넓게 교육기회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사 1교 자매결연, 장학재단의 운영 방침 변경,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단체 수탁어형 할인 금액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다. 이번 기회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행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할당된 20%를 채우지 못한다고 다른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사실상 진입 장벽을 해 놓고 균등한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폭 넓게 교육기회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사 1교 자매결연, 장학재단의 운영 방침 변경,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단체 수탁어형 할인 금액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문제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다. 이번 기회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행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에 떠 넘긴 사회복지업무 정부가 맡아야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2000년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는 가정 해체, 실직, 빈곤 등에 따라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지역민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6만5195명으로 인구 대비 4.5%, 전남은 10만8679명으로 5.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 3.2%에 크게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0년 4만9954명으로 3.6%였으나 2007년 4.3% 등으로 매년 2500명 가량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 해체와 노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노인층의 일자리 부족 등 취약한 경제 여건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수급자 증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2005년 사회복지업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지방의 현실 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비 보조는 오히려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휘청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69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0%에 달한다.

이제는 지방에 넘겨진 사회복지업무는 정부가 다시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머지 않아 거덜나게 돼 있다. 다 소나마 지방에 도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마저 정부가 감세하는 마당에 사회복지예산은 지방에 전가시킨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를 다시 환원하는 방안부터 찾는 게 순리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업장 bungle@kwangju.go.kr〉

최근 6년 새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1만4000여 개가 감소하고 종업원 수도 4만여 명이 줄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고용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창업 중소기업은 지난 2002년 3만7661개에서 2008년 2만3036개로 1만4625개가 줄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역시 10만5839 명에서 6만5150명으로 4만 689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창업기업 대부분이 서민들의 생계형 일자리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생계형 일자리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92만 명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55만 명으로, 37만 명이 줄었다.

또한 2002년 창업한 중소기업 61만2298개 가운데 2008년까지 영업을 지속한 곳은 18만 9688개로 생존율이 31%에 불과했다. 10개 가운데 7곳이 6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셈이다.

생계형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 상권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은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리는 바람에 공급과잉 상태인 게 현실이다.

"해 먹고 살 게 없다"는 서민들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경제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치는 '친서민' 역시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더욱이 배추를 비롯한 채소값 등 최근 전정부지치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 가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생활이 더 이상 악화되지 전에 안정적인 생계형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업장 bungle@kwangju.g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요 칼럼



조영대

가을, 결혼시즌이다. 부부공동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어느 강의장에서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들더니 말했다. "난 지금의 부인과 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갈탄해 하는 데 강사가 물었다. "부럽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그럼... 고맙지요. 뭐~!" 다시 태어난다면 같이 안 살고 싶다는 얘기가.

부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원수인 것인가? '여보'라는 말이 어원이 女寶 또는 如寶에서 비롯됐다는데, 부부

나에게 내리신 보물인 것이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남녀가 오묘한 섭리로 짝을 이루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출산 및 교육으로 창조주의 창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참으로 숭고한 결약일진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아무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갈라서는 부부들의 행태에 가슴이 저며 온다.

짝을 찾는 과정에서 제발 물질 외적 조건보다 내적 인성을 더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성숙한 결혼 가치관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리고 결혼식은 먼 항해를 위한 기도를 한 번 하고, 전성터에 나가기 전 기도 두 번 한다

부부, 보물인가 원수인가?

는 '보물'과 같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부부님들, 서로를 보물처럼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라는 것은 잘못된 통계일지라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높은 이혼율을 보면 우리나라 부부실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자고로 '인륜지대사'라 했던 결혼이 '인륜지고통사'로 변질하고 만 우리나라의 결혼 실태... 영적 준비보다는 물질 준비에 치우친 결혼문화, 게다가 신혼부부 자란다고 할까, 똥대기 시장 같은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탄생한 부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간은 금슬 좋게 살아가는 듯하다가 안타깝게도 성격차이, 생활태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상처투성인 부부들. 그리고는 급기야 파국이 이르러 이혼도장을 찍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부부들이 너무도 많다. 서로 다름이 스트레스이기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서로 보완해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부부는 서로 조물주가

만, 결혼을 위한 기도는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듯이 가장 큰 모험과 고난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이다. 결혼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헌신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혼이란 '원리'이기 전에 '의무'이고, '납입'이기 전에 '역할'이다. 결혼은 자기 행복에 앞서 상대의 행복을 우선에 두고, 그의 인격적 성장과 완성을 위해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도우심을 빌며,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할 수 없는 것이, 올바른 결혼생활, 건강한 부부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가정교육부터 잘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성 교육,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겸손, 은유, 사랑(배려)의 능력 배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아내는 인내력 강화 등, 자녀들의 내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 어려웠을 때부터 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사위 원하기 전에 내 딸 좋은 며느릿감으로 교육시켜야, 좋은 며느릿감 원하기 전에 내 자식 좋은 사위감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상대에게 보물이 되도록!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기고

우제길

100년이 넘도록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 흔적을 담고 있는 양림산 선교사 묘역, 6·25전쟁 당시 전경고아들의 보육 장소였던 우일선 선교사 사택, 1909년 순교한 선교사 우원기기념관, 네덜란드 건축 양식의 수피아여고 홀 등 한국 교회 초기 유적들, 300~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녹색의 장원 양림동은 가히 광주 근대 100년이 응축된 곳이다.

다행히 양림동 일대 근대유적에 대한 관리와 관광화에 대한 여론이 아사시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의 특별한 관심으로 거듭나 307억 원의 투자로 금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 환경이나 보존까지가 양림동의 생태와 근대문화 어메니티

양식 건물들과 함께 근대문화의 어메니티(Amenity)를 형성하게 되었다. 1894년부터 광주를 찾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과정에서 전해진 서양문물에 의한 광주의 근대적 변화는 남구 양림동 선교사 사택에서 성 밖 부동다리(현재 불로동다리)를 지나 광주 읍성으로 이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형성된 대구시 중구의 진(기다란)골목 길은 서울의 피맛골처럼 종로를 우회해서 경삼감영까지 대구 개화기 100년의 역사 흔적들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시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당시의 문화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 달성구에 자리한 선교박물관의 110년 된 피아노를 마주 한 피아노 제작사의 사장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옛 것의 소중함을 고이 보존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감동 때문이라. 이처럼 대구는 개화기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현대의 감성에 소개 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근대사를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다.

높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배려보다는 현대적 개발에만 속력을 내고 있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 100여년의 숨결과 함께 자연의 섭리를 간직해 온 주변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대성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문화 기반 형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문화 보존에 대한 실효력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긴 양림동 일대의 근대성장이 관리와 보존 또는 문화상품화라는 개발 방식에 의해 뒤 늦게 인위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오롯이 보존되어 마음의 고향 같아 오시 찾고 싶은 그런 공간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향유의 장점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빌어본다.

양림동의 다양한 문화요소가 잘 융합되어 어른들에게는 향수, 젊은이들에게는 과거 역사의 반추와 내일에 대한 가능성이 앞질러서서 미래에 담담하게 이끌어 나가는 교훈의 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제길미술관장〉

편식 심한 학생들에 전통음식 중요성 알려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편식이 아주 심각하다. 반찬으로 김치나 나물이나 나오는 날에는 아예 손도 안대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 그와 반대로 햄이나 돈가스 등의 반찬이 나오는 날은 거의 남기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햄버거, 피자, 햄 등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쉽게 길들여지고 있는 건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아이들의 편식을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이 주는 영양의 균형, 또한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이 중요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걸 더 널리 알려 학생들이 우리 전통음식을 멀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